

정후식 칼럼



논설실장·이사

현재 광주광역시와 행정구역은 5개 자치구에 95개 행정동(洞)으로 구성돼 있다. 광주에 행정 단위로서 구(區)가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1973년 7월이었다. 6개 출장소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도시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른바 '구제'(區制)를 도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행정구역 가운데 중부·동부 출장소를 통합해 동구가, 남부·서부 출장소를 합쳐 서구가 출범했다. 1980년 4월에는 나머지 출장소마저 폐지되고 북구가 신설됐다. 1986년 11월 광주는 국내 네 번째 직할시로 승격됐고, 2년 뒤 송정시와 광산군 전역을 흡수하면서 광산구가 설치됐다. 이에 따라 광주의 면적은 215㎢에서 501㎢로 크게 늘어났다. 이어 1995년 3월 서구에서 남구가 분구되면서 지금의 5개 자치구 체제가 완성됐다.

광주에 구제가 시행된 이후 가장 극심한 변화를 겪은 지역은 동구이다. 동구 일대는 70년대까지만 해도 광주의 유일한 도심지였다. 다른 도심지가 생겨나기 전에 처음 형성된 '원도심'(原都心)으로 주요 관공서, 은행, 사업체들이 한데 모여 정치·경제·문화의 중심 기능을 수행했다. 그 역사는 광주 읍성을 중심으로 500년 이상 행정 중심지 역할을 했던 조선시대부터 계속되어 왔다.

하지만 도시가 확장되고 행정구역 개편이 잇따르면서 동구는 쇠퇴를 거듭하

광주 내 균형 발전 '큰 그림'이 필요하다

게 된다. 그것은 인구 추이만 봐도 알 수 있다. 1973년 동구와 서구가 처음 설치될 당시 광주 인구는 55만 2432명. 이 가운데 동구는 31만 명으로 절반이 넘었다. 이후 수차례의 분구로 1990년에는 20만 명 선이 붕괴됐고 2015년에는 10만 명 선도 무너졌다.

그 사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동구 중심의 단핵도시였던 광주는 상무·점단·수완 지구 등 외곽 신시가지가 잇따라 개발되면서 다핵도시로 변모해 갔다. 특히 동구는 2004년 광주 시청이 상무지구로 이전하고 이듬해 전남 도청이 무안 남악 신도시로 옮겨 가면서 공동화(空洞化) 현상으로 몸살을 앓았다.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상업·업무 시설들이 덩달아 빠져나가면서 금남로·충장로 상권은 유례없는 침체를 겪었고 도심은 활기를 잃어 갔다.

자치구 간 격차 너무 커져

그 결과 지난 7월 말 기준 동구 인구는 57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적은 9만 9228명으로 줄어들었다. 인구가 가장 많은 북구(43만 3463명)에 비하면 4분의 1이 채 안 된다. 남구 21만 5987명, 서구 29만 8898명, 광산구 40만 7133명 등에 비해서도 크게 차이가 난다. 각 분야의 구별 격차는 '광주통계연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기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동구 2734억 원, 남구 3912억 원, 서구 4614억 원, 광산구 6111억 원, 북구 6458억 원 등이다.

자치구 간 불균형은 비단 동구만의 문제는 아니다. 공공체육시설을 보면 서구가 37개로 가장 많은 데 비해 남구는 11개뿐이다. 공연장·영화관·미술관 등 문화공간의 경우, 40개로 가장 많은 동구

에 비해 남구는 고작 5개밖에 없어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물론 도시는 유기체와도 같아서 끊임 없이 변화하며 성쇠를 거듭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갈수록 확대되는 도시 내 불균형 문제는 결코 수수방관하고 있을 일이 아니다.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 나아가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동구의 경우 그동안 인구 격감으로 행정조직이 축소되고 교부세가 줄어드는 등 불이익이 뒤따랐다. 인구가 많다고 하여 마냥 주민들에게 유리한 것도 아니다. 한정된 숫자의 공무원이 감당해야 할 업무가 늘어나 처리가 지연되고 복지에 대한 부담도 증가하는 탓이다.

이러한 이유로 2000년대 들어 광주 내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자 광주시의회는 지난 2006년 '광주시 지역 균형발전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 2011년에는 전국 최초로 경계 조정에 들어갔다. 하지만 각 구가 몇 개 동을 주고 받는 미봉책에 불과, 동구 인구는 고작 5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급기야 20대 총선을 앞두고 동구는 인구 하한선에 걸려 광주 국회의원 의석수가 줄어들 위기에 처하게 됐다. 그래서 부랴부랴 행정구역상 남구 일부를 동구에 붙여 만든 것이 '동남 갑·을'이라는 기형적 선거구다. 광주시는 2018년에도 시민 설문과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경계 조정을 추진했는데, 소·중·대 등 세 가지 안이 제시됐지만 끝내 무산됐다.

이처럼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이 20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데는 일부 주민의 반발 탓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 정치권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본다. 이들은 선

거구 등 이해관계에 매몰돼 기득권 지키기에만 골몰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 '광주 공동체의 미래'라는 대의(大義)를 생각하며 추진해야 할 때이다. 다행히 광주일보가 최근 지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덟 명 모두가 경계 조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계 조정의 대원칙은 자치구 간 불균형 해소와 시민 생활 편의 및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각 자치구가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별 특성을 살려 조화로운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인구 배분을 해야 한다. 시기상으로는 올해가 적기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1년여 앞둔다. 다가오는 내년 상반기가 되면 이미 늦다. 정치적 환경이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경계 조정 추진해야

의견 수렴은 광주시가 주도하되 전문가와 시민들에게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정치권은 대원칙에만 합의한 뒤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처럼 공론화 절차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만하다.

다행히 경계 조정에 대한 광주 시민의 공감대도 이미 조성돼 있다. 지난 2018년 용역팀의 조사 결과 시민의 66.5%가 이에 동의한 것이다. 광주를 비롯한 호남은 과거 정부의 불균형 발전 정책으로 낙후가 심화됐고 그런 차원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나라도 균형 발전도 중요하지만 광주 자치구 간 균형 발전도 절실하다. 점점 커지는 우리 내부의 불균형을 언제까지 외면하고 방치할 것인가.

은펜칼럼

코로나 시대 희망, 자연 재배



류 동 훈 (사)시민행복발전소 소장

코로나19로 온 인류가 신음하고 있다. 언젠가는 끝나겠지 하는 기다림으로 버티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후에도 인류를 위협할 바이러스가 등장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공장식 사육에서 자주 발생하는 조류 독감과 구제역은 인간에게 전염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조류-돼지·소-인간을 넘나드는 바이러스들이 서로 합성되면서 변종을 일으키면 결국은 인간, 조류, 돼지 등을 모두 공격하며 무엇이든 열 수 있는 마스터 키처럼 모든 종에 증상을 일으키는 슈퍼 바이러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바이러스 X'다. 백신을 개발하여 코로나를 잡는 다 허더라도, 그 다음 또 닥쳐오는 바이러스의 공격은 무엇으로 막을 것인가?

그때마다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등교를 중지하고, 재난 지원금을 받고, 백신을 개발하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필자는 과연 지금 코로나19가 기존에 등장했던 바이러스보다 훨씬 치명적이어서 이렇게 인간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몸이 면역력이 약해져서 이런 바이러스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봐야 한다. 우리의 몸은 먹을거리로 이루어진다. 무엇을 먹느냐는 어떤 몸을 만드느냐를 결정한다.

그런데 지난 100여 년 동안 인류는 퇴비, 비료, 농약으로 키운 농산품과 공장식 사육으로 키우는 가축을 섭취하며 세대를 이어 오고 있다. 퇴비 역시 유전자 변형 농산품 사료, 항생제를 먹는 가축들의 배설물이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철새는 조류 독감에 쓰러지지 않는데, 사료를 먹어서 사육하는 닭들은 쓰러진다. 이 차이가 무엇인가? 바로 자연 상태의 건강한 먹거리를 먹고 날아다니는 철새는 바이러스를 이겨내지만, 밀식 사육을 하는 닭들은 바이러스에 버티지 못하는 것이다.

인간의 먹거리도 마찬가지다. 자연 상태의 건강한 먹거리를 먹는 사람은 강한 면역력을 가지게 되고,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것이 당연하다. 농약에 대한 위험성은 많이 알려졌서, 농약을 안 한 유기농 먹거리 운동은 활발하다. 그런데 퇴비와 비료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한다. 퇴비와 비료를 많이 넣게 되면 잘 자라기는 하지만, 오히려 병충해에 약해서 겉보기에 좋은 상품으로 키우기가 어렵다.

그런데 광주를 비롯한 전국에 농약은 물론이고, 퇴비와 비료를 넣지 않고 자연 상태 미생물만 넣어서 기르는 '자연 재배' 농법을 시도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분들은 작물을 재배하는 초기에는 생산량이 떨어지지만, 나중에 토양이 자연의 힘을 회복하면 수확량이 더 많아진다고 한다. 특히 산속의 초목들이 퇴비·거름을 넣지 않아도 잘 자라는 것은 흙속에 있는 미생물과 식물의 뿌리가 서로 먹을거리를 주고받는 상호 작용을 통해 영양과 물을 만들며 스스로의 힘으로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광주에서 는 포도나무·한라봉 등의 과일에 물을 주

지 않으면서 미생물과 뿌리의 상호 작용으로 더 강하게 맛과 향을 내고 열매도 많이 맺게 하는 생산자도 있다.

비료나 퇴비 없이 자라는 자연 재배 농작물들은 병해충을 스스로 이겨내고, 농약을 칠 필요가 없어 노동력을 대폭 감소시킨다. 건강한 자연 재배 농산물을 먹는 인간의 몸은 더 강한 면역력을 가지게 되고,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의 공격을 더 잘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몸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 재배는 새로운 농업이 아니다. 우리 한민족이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온 지는 4000년 정도 된다고 한다. 지난 100년을 제외한 3900년 동안 조상들은 농약·퇴비·비료를 넣지 않고 자연 재배를 해왔다. 앞으로도 4000년간 지속 가능한 민족이 되기 위해 자연 재배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자연 재배 생산자와 소비자를 육성하는 학교, 자연 재배 소비자 네트워크 구축, 초기 생산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펀드 조성, 자연 재배를 시범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특구 조성 등의 정책을 추진하면 좋겠다.

기 고

초고령 사회 대비 노인 복지 인프라 확충을



이 정 서 조선이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유엔에서 정한 고령 사회의 기준은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2%에 달하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이후 노인 인구가

14% 이상 증가하여 2017년에는 고령 사회에 진입하였다. 통계청은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2025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인 인구 증가 속도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 진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17년에 불과했다. 선진 노인 국가의 경우 고령 사회 진입 기간이 프랑스가 115년, 미국 73년, 일본은 24년 등이었다.

정부는 지난 8월 27일 '2기 인구 정책 테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 의하면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경로 우대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 안팎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령 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교통이나 주거 편의,

지역 사회 활동 참여 등 다양한 노인 친화적 환경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발표는 미래의 초고령 사회에서 노인들이 받는 사회적 혜택 기준은 상향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급속화되는 고령화는 기대 수명이 급증하고, 출산율이 하락하는 사회적 구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노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더 증가하는 게 현실이다. 고령 사회가 되면 국가 발전과 성장에 필요한 생산 연령 인구(15세 이상 64세 이하)의 감소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부정적 요인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고령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노인 복지 시설 인프라 확충이다. 이러한 인프라는 노인들의 여가 문화 환경 개선으로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 은퇴자를 위한 제2의 인생 설계 프로그램 개발, 소득 지원의 일자리 사업, 장기 요양의 맞춤형 서비스 확대, 노인 체육 시설(당구장,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의 확충 등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노인들이 더욱 행복한 삶, 활기차고 신바람 나는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복지 시설의 조성 및 맞춤형 서비스 확충을 위해 장·단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에 따라 지금부터 하나씩 촘촘하게 준비하고, 노인 복지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社 說

갈수록 어려워지는 자영업자 지원책 있어야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어제도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이 있었다. 연단에 선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지금 가장 위험한 세 번째 고비 중에 우리들이 있다. 지금이 그 위험한 고비의 서막일지 또는 한가운데일지 아직은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데 이어지는 그의 말 중에서 거리 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운영시간과 영업 방식을 제한받고 있는 자영업자 등 이웃의 인내와 희생을 기억해 달라는 말이 귀에 들어왔다.

"거리 두기의 뒷모습에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희생과 눈물이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듭 죄송함에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이웃과 노약자분들의 인내와 고초, 또 저 있는 자영업자들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했다. 특히 "반드시 이번에 확산세를 꺾어 야만 이분들의 마음의 무게 또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 대목이 참 인상적

이었다.

그의 말처럼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 계층이 또다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요즘 음식점에 가 보면 점심 시간에도 한산하다 못해 썰렁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 1차 코로나 사태로 큰 피해를 본 이들은 사상 최악 정세에 2차 재확산까지 겹치면서 또다시 폐업의 기로에 서 있다.

이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행히 황남기 부총리는 그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정부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은 기금과 예비비 등을 활용해 2조 5000억~3조 원가량의 재원을 마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시기가 문제다. 이들에 대한 지원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소비가 급감하고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국면에서는 무엇보다도 신속한 조치가 절실하다.

환자 피해 속출 더 늦기 전에 진료 복구를

광주·전남 지역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이 열흘 이상 이어지면서 애꿎은 환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전체 전공의 가운데 90% 이상이 파업에 참여함에 따라 수술과 진료에 차질을 빚는 등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당국에 따르면 전남대병원 314명, 조선대병원 142명, 기독교병원 46명, 광주보훈병원 27명 등 지역 대학·종합병원의 전공의 가운데 90% 이상이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은 이들 병원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을 받는 한편 진료도 맡고 있다. 한데 이들의 진료 거부가 계속되면서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의 경우 수술실을 절반밖에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양 대학병원에서만 하루 평균 100명의 환자들이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환자 진료도 평소의

70% 선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어 이들 대학병원에서 당일에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 수는 1500~2000명에 이른다. 화순 전남대병원 역시 지난주 수술 건수가 파업 이전보다 40% 줄고 입원 환자 규모는 18%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공의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교수 등 나머지 의료진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지난달 21일부터 시작된 전공의들의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이 같은 진료 공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지금은 코로나 집단 감염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하는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철회와 관련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의료계의 요구도 어느 정도 반영된 셈이다. 전공의들은 더 이상 환자들의 피해가 커지기 전에 진료 현장에 복귀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심리학 용어에 '확증편향'(確認偏向)이라는 게 있다. 영국의 심리학자 피터 웨이스이 1960년에 처음 정립한 개념이다. 자신의 가치관, 신념,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만 믿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이다. 쉽게 말하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현상'이다. 스스로 세워 놓은 자신만의 기준과 믿음 속에 잘못되고 왜곡된 정보도 사실인 양 믿어 버리는 것이 문제다.

뉴스로 선동하는 목사의 말을 철석같이 믿는다. 일부 극우 유튜버들은 확인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방송을 통해 가짜 뉴스를 만들어 내고 있다. 정부가 아무리 가짜 뉴스라고 해도 이들은 믿지 않는다. 이 때문에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통제되어 왔던 코로나 방역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확증편향'

믿음은 믿는 마음 또는 그렇다고 여기는 것이다. 종교적으로는 신과 같은 성스러운 존재를 신뢰하고 이에 복종하는 것이다. 믿음은 개인적인 영역이다. 어느 종교를 믿든 어느 정당을 지지하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다. 하지만 확증편향을 통해 만들어진 믿음은 사회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최근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8·15 광복절 집회 참가자 등이 이러한 확증편향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진검사를 받으면 무조건 양성이나오니 검사를 거부하라' '정부가 확진자 숫자를 조작하고 있다' '교회에 누군가 코로나 테러를 했다' 등의 가짜

종교적으로 믿음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 믿음이 신이 아닌 목사 개인에 대한 숭배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잘못된 믿음을 통해 남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것은 종교의 의미와 목적에도 어긋난다. 코로나19는 과학이 입증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비합리적 전염에 대한 경고는 너무나 당연하다.

"정말로 힘든 상황이 온다면 시계를 되돌리고 싶을 순간이 바로 오늘날 것일 것이다." 며칠 전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는 방역 당국이 얼마만큼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확연히 보여 준다. 더 이상 우매한 믿음이 모여 사회를 망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최권일 정치부부장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1(일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